

특집 좌담: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판과 대안 모색

참석자: 강내희(중앙대 영문과)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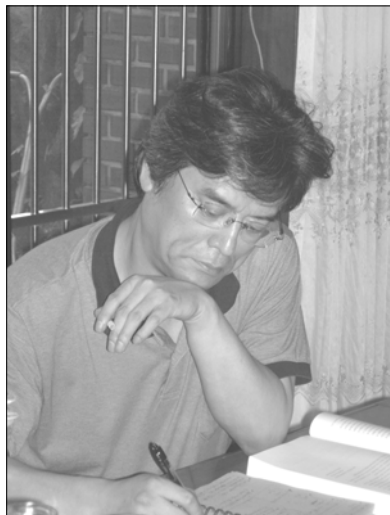
이동연(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심광현(사회, 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일자: 2006년 8월 18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문화과학 사무실

사회(심광현):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판과 대안 모색’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좌담을 갖게 되었는데, 이 주제는 그간 여러 차례 『문화/과학』만이 아니라 『진보평론』을 포함해서 여러 지면에서 다뤄왔고, 관련된 단행본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를 새삼 다시 다루려는 것은 최근 한미FTA 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통해 국내외 정세가 전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화 및 지형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저지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가 최근 사회 전반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시기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에 어떻게 전개되어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었고 각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야만 제 모습을 드



러낼 것이고 또 운동의 증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1부에서는 그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모아보고 쟁점 토론을 통해 좀더 명확한 비판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2부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와 동향,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와 동향의 큰 흐름을 함께 연관지어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어 3부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안 세계화운동의 흐름을 짚어보고, 좀더 확대된 대안의 윤곽을 논의해 보는 것으로 좌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요 쟁점에 대해 돌아가면서 얘기한 후 하나씩 토론해 보도록 하지요. 지난 1년간 미국서 초빙연구원 생활을 하시고 며칠 전에 돌아오신 강내희 선생님께서 따끈따끈한 미국 경험을 포함해서 신자유주의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1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쟁점

강내희: 오늘의 세계가 처한 국면을 설명할 때 “세계화”라는 말을 쓰느냐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난 1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학계 인사들과 접촉한 바로는 그 쪽에서는 “신자유주의”란 용어는 거의 쓰질 않는 것 같더군요. 대신 “제국”이나 “제국주의”라는 말은 자주 쓰는 것 같고, 특히 “세계화”를 자주 거론하더군요.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많은 상황이 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질 않고 또 그런 세계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난관이 있는 듯 싶더군요. 학계에서도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회적 의식을 주도하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여론에선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오늘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도



그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사회: 미국과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판적 지식인들의 다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문제설정이 아예 없거나 약하다는 말이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현실을 파편적으로 보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다른 것 같은데요.

강내희: 예, 미국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직접 문제로 거론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지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 문제의식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동안 국내 비판적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자유주의 문제를 다뤘은 결과이겠지요. 그래도 신자유주의보다 세계화라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세계화론으로 오늘 정세를 설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오늘의 세계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는 것인 듯합니다. 현단계 세계의 변동을 세계화라고만 보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파악하느냐는 정치적 입장의 문제니까요. 미국에서도 맑스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예컨대 데이비드 하비 같은 사람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지식인 중에는 비-맑스주의자가 다수인데,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지 않더군요.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문제’라고 보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볼 때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세균: 강선생님이 제기한 문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지칭할 때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을 쓰다가 최

근에는 “근대사회”, “탈근대사회” 등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사회”라는 개념을 쓰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근대사회의 자본주의적 사회 성격을 놓쳐 버리는 측면이 있지요. 근대-탈근대의 문제설정을 옹계 수용한다면 오히려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랄까 하는 개념이 더 옳을지 모르지요. 요컨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문제의식을 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의 국면을 “세계화”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재 국면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계화라는 말 그 자체는 국민경제와 인간 삶이 세계적으로 연관되고 확대, 심화되는 것을 일컫는데, 이런 세계화라면 세계 발전의 기본적 경향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맞이하는 세계화의 국면을 그저 “세계화”라 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 하는 이유는 이 세계화가 기본적으로 자본 주도의 세계화라는 것이고, 또 자본 주도 세계화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자본 주도의 세계화 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사회적 민주적 규제 영역이 철폐되고, 민간영역을 상품화하는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란 말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동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쟁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

고 싶어요. 첫째, 신자유주의 담론과 세계화 담론이 서로 연계되어 논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좌파들은 주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보고, 우파들은 주로 세계화 담론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파두라이나 아



리프 딜릭처럼 비판적인 탈식민주의자들조차도 세계화를 국지적인 문화실천에 있어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만 생각하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야기되는 폐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자유주의 담론과 세계화 담론을 동시대적인 맥락으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좌파들이 세계화를 사고할 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좌파에서 신자유주의를 논의할 때 얼마나 내실 있는 비판이 될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가령, 꼭 나쁜 세계화만 있느냐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민중 연대가 조건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세계화는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의 세계화라는 세 차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경제·문화 영역의 세계화가 어떻게 얹혀 있는가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문화적 세계화를 얘기할 때는 정치, 경제적 차원이 사상되어 버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요. 이 세 가지 영역의 세계화가 어떻게 얹혀있고 상호적 조건이 되는가에 대한 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광현: 이동연 선생께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등치되기보다는 상이

한 층위에서 절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인 듯한데요, 강선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내희: 이선생이 방금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본다”는 표현을 썼는데, 세계는 모호하게 들립니다. 신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보는 경우와 신자유주의를 문제로 인식하고 세계화를 보는 경우가 혼동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세계화가 모두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을 쓸 때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일어나는 세계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점에서 그 표현은 오늘날 진행되는 자본 주도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태도임을 분명히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세계화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의 세계화와 투쟁의 세계화 등은 지지하는 거지요.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파와 입장을 구분하는 태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좀더 생각하면 좌파의 일부와도 입장 구분을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적 지식인들이 스스로 좌파라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런 점에서 좌파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축적 전략을 주된 분석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좌파와 그렇지 않은 좌파를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제 견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올바른 용어 구사라고 봅니다. 오늘의 자본 축적 전략과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비판적 지식인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주의 세계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 명명하는 것은 이전의 세계화와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가 깨지면서 자본이 새로운 축적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영국에서 대처, 미국에서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뒤로 신자유주의 세력이 국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되고,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와 경합을 하던 자유주의, 더 구체적으로 과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한 자유주의, 케인즈주의와는 구분됩니다. 많은 정책 내용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한 자유주의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다른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신자유주의라는 거지요.

김세균: 자본주의 발전과 세계화는 같이 갑니다.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영국 주도하에서 자유주의가 발전했던 상황을 ‘구자유주의’라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진보적 역할을 수행했어요. 구자유주의는 봉건적 질서, 폐쇄성 등을 혁파해 나가고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념 등을 발생시켰고, 사람들을 신분적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식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 일방화하면서 1, 2차대전으로 파탄을 맞게 됩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 자본주의가 형성되는데요, 초기(1945-1980년대)에는 자본운동의 과도한 자유화·탈규제화가 세계 위기의 주범이라고 판단하면서 ‘규제된 세계화’ 즉 자유무역의 대상도 가능하면 상품으로 한정시키고, 특히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격 규제하고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과잉축적 위기가 등장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깨뜨리는 반동적 공세라는 점에서 구자유주의가 가졌던 일정한 진보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강내희: 제라르 뒤메nil과 도미니크 레비가 공동 작업한 바에 따르면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미국의 상위 1% 소득층이 가진 소득 지분이 전체의 16%였는데, 이것이 수정 자본주의 또는 규제된 자본주의를 거치며 줄어들어 1960년대에는 8% 정도가 됩니다. 현실사회주의와 케인즈주의하에서 부의 하향이동이 일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뒤메nil과 레비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이 흐름이 바뀌어 1990년대 말에 이르면 다시 20세기 초와 상황이 비슷해져 상위 1% 집단의 소득 지분이 16% 정도가 된다고 밝힙니다.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부의 상향이동을 위한 전략인 셈이고,

그들에 의하면 자본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투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제적 부의 상향이동을 위해서 정치와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냐는 것입니다. 이선생이 앞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영역에 따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정치, 경제, 문화를 ‘영역’(domain) 보다는 ‘차원’(dimension)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 튜린슨의 지적대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영역”으로 보면 각자가 독자적인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침범하거나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반면 “차원”은 그런 구분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의 현실 속의 다양한 측면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관관계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는 경제적 차원이 가장 크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을 위한 권력투쟁 혹은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의 상향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신자유주의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치적, 문화적 행태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향에서 경제와는 구분되지만 그것과 관계를 맺는 차원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경제적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의 차원에서도 경제적 차원의 흐름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말인데, 예컨대 정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문화 차원에서는 욕망 강화 경향이 나타나—물론 욕망의 강조에는 진보적 측면도 있지만—소비자본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향이 신자유주의인 것은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상위 1%와 같은 극소수 자본권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의 민중은 이런 흐름 속에서 희생을 당하는 국민이지요.

김세균: 크게 보면 과거 유럽의 경우, 절대주의 시대 때 밑으로부터 농민 투쟁이 터져 나오면서 농민적 권리가 향상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절대주의의 말기로 가면 구 귀족층들이 자꾸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과거에 농민들에게 양도했던 권리들을 재탈환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지요. 이것을 봉건적 반동이라고 할 때, 이게 가장 심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결국 봉건적 반동은 근대 시민혁명을 만들어낸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신

자유주의 세계화도 과거 수정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 대중에게 양도했던 권리를 다시 빼앗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의 봉건적 반동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강내희: 자본주의적 반동 혹은 근대적 반동이겠네요.

김세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새로운 반동이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흐름과 같이 가니까 신자유주의가 모든 것을 혁신시키고 바뀌나가는 진보적 흐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덧붙이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가 가진 기본적 특징을 드러내는 객관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국민들이 기존의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각 나라의 문화가 융화되고 연대를 만드는 식으로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문화적 조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분명히 하거든요.

이동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탈규제’인 것 같습니다. 자본의 무한 확장을 위해 국가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볼 때 노동운동도 역시 강력한 규제로 보는 차원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탈규범화”라는 말입니다. 우파 식으로 말하면 근대적 규범을 혁파하고 ‘글로벌스탠더드’를 정립하자는 말이겠지요. 즉,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세계화의 지표에 도달하자는 열망을 이데올로기화합니다. 자본의 탈규범화 논리는 자본가들만의 열망만이 아니라 시민적 열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탈규범화라는 표어 아래,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만족스럽고 쉼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대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기술혁명과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삶의 편리함을 갖고자 하는 인간들이죠. 이 과정에서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지역의 오랜 습속, 전통, 문화적 자원들을 폐기시키려 하고 대신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 윤택한 삶에 대한 과잉된 욕망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는 민족문화, 전통문화의 파괴일 수도 있고, 문화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죠.



권영근: YS정권 때부터
“개혁정부”라 말이 일상적으
로 쓰이고 있는데, 물론 노
정권도 “개혁”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혁”이란
“구조개혁”이 라고 생각합니
다. 구조개혁은 규제개혁(=
완화)과 소위 워싱턴컨센서
스가 그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거대 민간기업 우위의 세상’을 만드는 것, 기업은 정부의 규제와 사회적 의
무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신자유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트-우루
과이라운드 협상 이전에는 ‘구조조정 또는 적극적 구조조정’(positive
adjustment policy, 이하 PAP)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결과로 제3세계 국가들이 갇혀진
‘채무누적’(제3세계국가가 선진국의 민간은행에 갇혀진 채무) 문제가 있습니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국가들은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
정 정책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1986년 IMF는 정식으로 구조조정제
도를 개설하고 세계은행도 융자조건을 강화합니다. 그 조건은 금융 자유화와
시장개방이라는 IMF 처방전의 확대·강화로써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공부
문의 대량해고에 의한 정부 규모의 축소와 비용 감소,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
와 식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무역장벽 철폐 등을 포함합니다. IMF의
구조조정제도는 선진국 민간은행 부채를 공적 채무로 이관시키는 것이 목적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가 선진국 민간은행으로부터 IMF와
IBRD로 이관되지요. 구조조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전은 대부분의 제3세
계국가들을 세계은행과 IMF의 지배권 속으로 편입시켰고, 채무상환을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고, 이 결과 가장 전제적인 식민지 체제도 하지 못했던
“성과들”을 거둡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배후에는 물론 미국이 있습니다.
PAP, 구조개혁 또는 규제개혁의 본질은 브레튼우즈 체제 또는 팩스 아메리

카나 체제의 붕괴, 미국 중심의 자본축적체제의 위기와 변화이며,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체제의 확립이며, 그를 위해 주변부 국가들의 구조전환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내지는 요구가 미국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모든 것을 ‘미국 표준’에 맞추라는 것(획일화=표준화=규격화)이고 미국적 표준의 세계적 전개(=세계화=WTO-FTA)인 것이지요.

사회: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 가지 구분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생께서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절대주의의 말기 구 귀족계급의 반동과 현재 자본의 반격을 묶어서 비교하셨는데요, 세계체제론에서 말하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큰 주기는 대략 100년을 전후로 한 단위입니다. 17-8세기에는 네덜란드, 19세기에는 영국,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으로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이행해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산업발전, 기술혁신, 고용창출, 노동에 대한 양보 등이 이루어지지만, 쇠퇴기에는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주도권의 이전, 금융노동자에게 양도했던 권리를 자본가들이 재탈환하게 됩니다.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한 각종 반작용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은 20세기 중반까지 양보했던 노동의 권리를 자본이 재탈환하고, 금융자본 주도하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윤율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은 부차화되는 현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쇠퇴기의 각종 징후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하비가 말하듯이 제국주의 시대로 얘기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강탈적 축적”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선생께서 말한 ‘탈규범화’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역의 규범을 깨부수고 자본의 논리를 강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일은 현 국면에서만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자본주의의 일반적 동학인 셈이지요. 이윤율 저하 경향이 심해지

니까 이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세계화를 추진하고, 노동에 대한 압박과 자원
 강탈 등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장기에는 봉합되어 있었던 영토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이 표출되면서 보다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나타나는 지역으
 로 헤게모니가 이행하게 될 때 쇠퇴해가는 헤게모니를 최후까지 유지하려다
 보니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 자본주의를 대
 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형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초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내희: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보
 지만 현실사회주의 붕괴라는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자본주의 발전
 에 제동을 건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인데 이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 바로 이 시점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된 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1970-80년대 말까지는 현실사회주의가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만 신자유주의가 나타났지만, 사회주의가 붕괴된 90년대 이후
 WTO가 만들어져 그 경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탈규
 제, 탈규범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곧 신
 자유주의가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 이면에는 현실사회주의의 관료
 주의 문제 혹은 케인즈주의에서의 관료주의 문제가 대중들로부터 근본적 지
 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칠레처럼 군사적 독재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로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에
 서는 소위 우파적 폴뿌리주의가 있어서 신자유주의를 지지했거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 자체 내의 고유한 동력이 작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역
 동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 제 얘기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최근의 흐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파악해야만
 보다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19세기에 영국자본주의
 가 쇠퇴할 때 두 가지 반작용 혹은 대안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국 자본주
 의의 부흥이고, 또 하나는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에 기반을 둔 볼셰비
 키 혁명이지요. 두 대안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것은 영국 자본주의의 중흥기

가 아니라 쇠퇴기입니다. 영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실패를 거듭했지요. 반면 영국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모순의 폭발 속에서 미국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고 죽은 것 같았던 사회주의 운동이 부흥할 수 있었지요. 결국 이 두 대안은 각기 힘을 키우고 경쟁하면서 20세기 중반 냉전 구도로 양분된 세계화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한편 당시 경쟁적으로 출현한 파시즘 체제가 이 두 대안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1930-40년대 서구에서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주의, 사회주의 등 수정 자본주의가 확산된 것은 한편으로는 성장기의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에게 양보할 여분이 있었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의 강력한 견제 덕분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90년대 초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견제세력이 없어지자 자본이 더 이상 노동계급에 대한 양보를 할 이유가 없어졌던 상황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구적 확산에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 자본주의는 강력한 견제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윤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악의 반동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세균: 앞으로 더 심화되겠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생겨난 이유가 자본주의의 내적 원인 때문이나, 아니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때문이었냐 하는 문제로 잠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동시에 작용한 거죠. 이론적으로 따져 본다면, 사태변화를 가져오는 데 대한 내적 분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과잉축적이 주된 요인이고 현실사회주의 붕괴가 촉진의 요인이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한편, 세계체제론자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경험론적 분석이지요. 경험적·통계학적 분석을 일반화시킨 거죠. 이보다 더 나아가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는 게 맑스주의 이론가의 역할입니다. 제 입장은 자본의 대 순환 과정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왜 나타나는가? 자본주의 상승기는 산업적 축적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생기지요. 하강기에는 물질적 축적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으로 금융적 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적 축적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이윤율이 낮아서 투자를 해봤자 돈 벌 데가 없어지므로 좀 잘된다 싶은 곳에 투자를 해서 금융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크게 보면 강탈에 의한 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축적의 타락한 형태입니다. 고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파국이 와야 하는데, 대파국도 나타나지 않고 지루하게 끌여가는 형국이 당분간 지속될 듯 보입니다.

사회: 대파국이 온다는 말은 대규모 전쟁이 나든지 하는 것일텐데, 요즘은 워낙 미국과 여타 나라들 사이의 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소파국, 즉 요즘처럼 이라크 전쟁이나 레바논 전쟁 같은 국지전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또는 1929년 같은 대공황이 나타나든지요.

김세균: 대공황이 오면 공장만 쓰러지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도 죽어납니다. 그럼 한번 썩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날 대공황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의 과잉축적의 핵심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생산량을 줄여버리고 괜찮다 싶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하니까 공황도 안 오는 거예요.

사회: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윤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으로 자본의 성격이 바뀌면서 노동과 자원의 강탈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런 과정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심화된 결과인 셈입니다. 특히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견제세력이 없어지자 강탈적 축적의 세계화를 위해 WTO가 창설되었으나, 각국의 저항으로 다자주의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않자 2000년대에 들어서는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정으로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세균: 보충하면, 소위 조절이론에서는 축적체제가 안정되지 못하면 위기 후 다른 축적체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가령 포드주의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유연적인 포스트포드주의 체제로 간다고 설명하는 거지요. 이 이론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는 게 지금이라고 봐요. 포드주의가 포스트포드주의

로 변화하면 새로운 안정이 와야 하는데, 체제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이론이 장기적 변화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지요.

다음으로 미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은 1980-90년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구적 제국건설’ 노선을 견지했죠. WTO 체제 만들고 그 체제 속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이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안에서는 자기도 규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이제는 미제국의 ‘직접적 확장’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미국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 세계의 분열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제국에 포섭된 국가 대 포섭되지 않은 국가의 대립을 보십시오.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제2단계 국면이어서, 앞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체를 파탄 낼 것이 분명합니다.

강내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파탄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김세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제국의 안정 포섭정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국가간 대립을 불러와서 결국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권영근: 신자유주의는 사실 미국의 국내문제 해결용, 즉 미국 일국 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위기를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면서 극복하려는 것이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욱 큰 범위로 확장시키는 게 세계화 아니겠어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처음 도입한 것은 대처 집권 이후였고, 그 뒤를 이어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 확산시킨 것이지요. 미국은 70년대부터 G7 등 과두 지배체제로써 세계경제를 운용하여 왔는데, 이를 더 한층 강화한 것이 IMF를 통한 PAP였으며, 결국은 WTO체제를 모색하게 됩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국내의 과잉축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탈구조를 세계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FTA까지 오게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합의된 WTO체제의 이념 붕괴와 그 체제의 한계가 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GATT, WTO 등 국제협약을 FTA가 깨는 것이거든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합의

된 글로벌 경제의 물은 특히 금융자본의 통제와 활동제한 및 그 활동범위도 국경 안에 가둔다는 것이었고, IMF 조약 제6조도 “가맹국은 국제자본이동의 규제에 필요한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걸쳐서 신자유주의적 PAP를 통해 금융의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기업주도의 금융의 글로벌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WTO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UN에서 특히 UNCTAD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힘의 결집이 강화됨과 함께 미국은 그 힘을 약화시키고 WTO를 창설했지만, WTO에서도 G-77+a(중국)의 결집된 힘의 강화가 나타나자, 미국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약육강식의 노골화가 예상된다는 말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이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내부에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투쟁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사람들도
노동 강도의 강화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방식을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신자유주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안과 밖에서 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즉 약탈의 세계화와 함께 연대의 세계화도 함께 온다고 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금까지의 문명구조
의 한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가는 방식인데, 그 피해자는 민중과 생태,
환경 등 약자들이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문명구조의 비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까지의 문명구조는
지하자원 의존형 문명구조이며, 그 자원을 변환하는 구조입니다. 우라늄이라는
지하자원으로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무에서 펄프로 종이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문명구조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적 경제성장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시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고, 일국 내에 자원의 고갈에 직면하면 세계화를 통해 자원을
대량 수입(∴ 이를 위해, 공업발전국가는 ‘자유무역’을 요구)하여 성장을
하는 자원변환구조는 그 외연을 확장하여 가야 하는데, 이것은 폐기물의 축
적을 통해 생태, 환경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WTO-FTA체제는 자원빈

곤국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폐기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쓰레기 처리
장화하는 측면이 강화되어 갈 수밖에 없지요. 생명을 방어하려면 신자유주의
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대는 인간의 일상 활동이 공업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기술이
중요시되어 왔고, 이 공업문명 구조의 필연적 산물은 국소적·기술적 시스
템은 현저히 발전시켜온 반면, 광역적·생태적 시스템은 현저한 열화를 초
래해서 이런 현상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석유화학
공업,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공업에 이어서 정보·신소재 기술, 즉 IT, NT,
BT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분비교란
물질’(EDCs, 소위 환경 호르몬), GMO, 배아줄기 세포 등에 대해서는 참미
일색이지만, 삼림의 침식과 사막의 가속적 확대, 핵물질의 대량 축적, 물질
생산의 폭발적 증대, 생태·환경파괴 및 무해화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위기가
참미만 받아온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 기묘합니다.
인구증대나 핵전쟁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는 논의를 잘 하지만, 물질생산의
증대(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도 이것들에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 지상주의 비슷하게 찬
미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이러한 고도의 기술에 의한
세계적 지배통제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는 당연히, 인간 생(명)활(동)의 풍토성, 그 풍토성의 다양성과 전통성을 말
살해야 성립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공업문명의 본질은 지하자원의 힘에 의존하는 존재방식인데, 그
공업 시스템이란, 지하자원을 채굴하여 유용한 것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
리므로 환경 속에 축적되어 가는 구조이지요. 그러나 지구의 물질량은 증가
도 감소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매장량과 재화로서 존재하는 량과
폐기물의 량을 합하면 일정하다. 공업기술이란 이러한 물질변환을 증대시키
는 하나의 매개체로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하
에서 채굴된 자원은 단기적으로는 유용재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유용재로

쓰이지 않은 잔여의 자원과 유용재로 사용된 자원은 모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로 축적되는데, 엄청난 양의 폐기물로 물질변환을 증대시키는 것이 근대 과학기술의 본질적 성격이고, 둘째는 근대 공업기술의 영향으로 매일 천여 종류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서 인간에게 유용한 측면도 제공하지만, 이 신물질은 사용되고 난 후, 생태계의 화학적 오염을 초래하는 물질로 다시 변환시키는 것이 근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업기술이 진보하면, 무언가는 좋게 된다”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입니다. 장기적 관점, 민중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환상임을 일깨워 주는 노력이 제3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같이 근대 공업기술은 물질변환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물질변환을 촉진·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생산지향성이 강한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태계 파괴·환경파괴·생명파괴를 중심적 해결과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 본질이고, 근본적인 성격이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대, 증폭시켜서 세계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근원적 비판은 세계도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화이지요. 이걸 반드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의소비형 구조와 자원변환구조라는 문명의 측면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논의, 비판, 대안모색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좀 살펴볼까요?

이동연: 그 전에 문화적인 측면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대 말에 영국 반숙련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많이 가출했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게 ‘하위문화’의 출현입니다. 이 문화가 사라지는 게 1970년대 말인데 이때가 대적

의 등장시기예요. 대처리즘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나마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 말하게 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펑크담론이 신보수주의화되면서 상품화되고, 문화가 스타일의 문제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른바 저항적인 펑크문화가 유명한 패션브랜드의 액세서리로 흡수되는 거죠. 1980년대 들어가면 여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청년 부르주아라 할 수 있어요. 1980년대 여피문화와 1990년대 이후의 차이는, 1980년대가 유럽 주도 여피였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여피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묘하게 문화다원주의로 ‘번역’되요. 이 과정에서 ‘차이의 문화’ 담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탈규범화, 탈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화적 다원주의는 그 속에 있는 불평등, 갈등, 모순 등을 가리고 있는 역할을 하지요. 최근의 보보스족 등은 펑크의 스타일을 자기 식으로 부르주아화하는 건데, 이게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게 위성TV 등 다국적 매체고요.

사회: 예, 70년대 이후 문화변동이 신자유주의의 전개 과정과 어떻게 상관되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얘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확립된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해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자본의 강탈적 축적, 노동 권리의 박탈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강력한 국가적 통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가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내희: 국가 해체 혹은 국가 약화론 이야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세계화 담론 안에서 계속 나오는 담론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듯해요. 첫째는 국가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공적 기능 약화는 국가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겠고 반면에 통제기능의 강화는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증가,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등 경찰국가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 정세에서는 국가

기능의 약화와 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경간의 각종 흐름들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고, 전통적으로 국가가 가진 고유한 주권적 요소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변화 속에서 국가가 공적 기능 약화와 통제의 강화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할 때, 흔히 국가가 글로벌스탠더드나 지구적 자본가 계급(global capitalist class) 등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이 증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복지나 공공정책과 같은 공익적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며 공공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기본 역할을 외면하면서도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을 전개하는 지구적 자본가 계급이라는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고객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국가 기능의 변화라고 봅니다.

권영근: 탈국가화에 대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한 이후, 탈냉전시대의 세계에는, 이제 ‘국민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국경 없는, 국경을 초월한 시대라는 것, 그래서 자본도 국적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학자들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고로 글로벌리즘을 위해서, ‘국민국가’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고, 글로벌리즘의 탈국가적 관점과 구조개혁의 시장중심주의적 관점을 일치시키고, 글로벌리즘을 ‘국가’나 ‘국민경제’와 전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킨 일등 공신은 매스컴입니다. 여기서 구조개혁의 핵심은 각국 경제를 세계화에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미국을 어떻게 “복제하느냐”는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구조개혁의 과제를 부상시키기 위해 매스컴이 나선 것이지요. 매스컴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세계 도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글로벌리즘 비판의 논의들을 ‘반-시대적’인 것으로 무시했고, 여론도 매스컴의 이런 시대융합적 발언에 부화뇌동했고, 이런 부화뇌동은 사회로부터 ‘확신’을 탈취했으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싹틔우게 되어 정책혼선을 초래시킵니다. 결국 목소리 큰 자의 소리가 모든 사람의 소리를 잡아먹는 ‘극장사회’형 구조가 더욱 혼란을

가속시키고 정치가와 정책입안자, 행정담당자도 매스컴이 주도하는 여론에 따라 춤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G7 정상회담을 보면,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각국의 국익은 대립과 상극을 초래했고, 따라서 국익의 조정이 중요과제로 되었는데, 이는 글로벌화라는 탈국가화의 진전과 동시에 국가의 의사와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역설이 탄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경제의 진전이 현실적으로 더욱 ‘강력한 국가’를 요청한다는 것이지요. 세계화라고 하면 국경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능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죠. 간단히 살펴봅시다.

미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쌍둥이 적자,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직면했는데도 냉전을 거치며 승리=패권을 달성하는데 이같은 미국의 승리는 왜 가능했는가? 기본적 이유는,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명확한 ‘국가’의 미래상과 분명한 ‘국가’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국가적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미국 국가의 ‘강함’=정부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타국을 미국의 속국처럼 취급할 수 있는 미국 국가가 가진 정치력, 그리하여 타국의 경제정책과 외환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국가적 욕망’=글로벌 파워가 글로벌 경제를 미국 중심으로 주도하는 힘이라는 거죠. 미국의 국가의 강력한 국제정치력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은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선택한 ‘국가적 욕망’ 즉 전략은 경제의 중심 산업을 제조업으로부터 금융산업, 지식·정보산업, 생명공학, 농업분야,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세계적 규모에서 미국 경제의 우위를 확립시킨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국가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는 일면 정책 협력(당근)을, 다른 한편에서는 강압(채찍)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OECD 등 선진국에게는 정책협조와 쌍무적 협상을 통한 강한 압력 그리고 미국을 위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3세계 국가가 다수인 UN의 무력화와 IMF-WTO(Globalism) 체제에 대한 순응을 요

구했습니다. 즉, 1982년부터 G7과 OECD 등에게는 적극적 구조조정(PAPs)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게 미국의 외환전략과 재정적자 지원을 위한 정책협조, 특히 일본에게는 미국의 국채 매입과 달러 지원을 위해 미국 국내에 고액 투자를 추진하도록 요구했고, 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통해 무역마찰 해소의 일환으로 각국에 내수확대를 요구하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이에 적극적 협조를 하면서 일본의 자체 경제는 버블 경제에 빠져버립니다. 90년대에는, WTO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요구에 따른 소위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른 각국 국내의 제도개혁=구조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요구를 추종, 수행하는 것이 ‘개혁정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98년 아시아 외환 및 금융 위기 이후에는 재정지출에 의한 내수확대와 구조개혁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강력한 ‘국가의지’에 의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라는 ‘기묘한 패권국’을 탄생시켰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유지를 위해,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적 금융자유화와 금융공학에 의한 선진적 금융시장을 창출하여(나스닥) 세계의 투자 자본을 유인했으며,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주가인상을 실현하여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금융적 패권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세계적 패권이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실물 부문의 ‘실적’을 만들거나, 적어도 그러한 기대효과와 기대창출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IT 혁명과 나스닥 시장의 창설이 시도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유지하고,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각종 투자를 요구하여 왔고, 또한 재정적자도 해외로부터의 투자(일본, 중국, EU, 한국 등이 증권시장에서 국채 등 매입에 의해 지원하는) 즉, 직접 투자와 동시에 국채 등 증권투자 자금으로 충당하여 왔고, 그러한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란, 이러한

취약성에 의해 성립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 현재화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취약성을 내부에 잉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되어 달러가치는 유지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는 목적대로 잘 되어가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게 되면, 달러가치의 폭락, 나아가 미국 국채가 폭락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은 또한 ‘구조개혁’의 미명하에 미국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른 타국의 제도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개혁’ 또는 ‘개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전개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국가의지’가 작용한 것이며, 세계경제에서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 중심으로 자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재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불확실성과 위기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는 국경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수주의 노선(시장중심주의)을 채택하고 신자유주의와 그 세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컨대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의 역할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글로벌리즘을 떠든다고 하여, 한 나라의 장래를 글로벌화된 시장경쟁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정치=국가 경영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며, 이 점에 민중투쟁의 초점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글로벌리즘의 본질은 미국의 ‘취약한 패권구조’를 그 토대로 한 것이며, 이 구조가 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독자적 승리=지배’를 가능케 하고, 모든 국가를 그 패권=지배 아래 편입시킨 구조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장황하지만 정리한다면, 미국은 자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은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수입의존도는 경향적으로 증가

하고 당연히 무역적자를 누적시키고, 달러 가치의 저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EU로부터 자본투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에로의 자본투자 환류를 위해 금융공학을 구사하여 상당히 이익기회가 높은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미국으로 환류되는 자본은 80년대와 90년대 초에는 직접투자 중심, 90년대 후반 이후는 주식투자와 국채, 그 이후는 사채로 변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환류되는 투자자본이 고도의 이윤기회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위험 부담이 큰 이윤기회와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미국 금융시장이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금융 상품 등에 의해 상당히 높은 이윤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달러가치 유지와 금융 불안에 대한 대응책이 불충분하기는 해도 미국 정부의 대처능력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미국에의 자본 환류의 배후에는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 타국과의 외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국가의 ‘강력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정부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미국이 벌이는 살얼음판 위의 글로벌 경제 구조가 어느 한 순간 붕괴되면, 일본과 EU가 경제 위기에 휘말려들고, 그러면 미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국은 타국에 대한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항상 행사하려는 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긴장구조(항상적 무력사용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세계화가 마치 국경이 없는 체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나라든 국가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김세균: 경제적 흐름이 나타나면 항상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흐름이 같이 나타납니다. 즉, 정치의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현재 국제적 레짐(regime)들이 생기면서 이전 국민국가가 맡던 권력을 양도해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력의 중심은 국가들이에요. 예컨대 UN이나 WTO 등이 직접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그리와 하트처럼 ‘제국론’을 펼치면서 국가권력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국가란 말은, 변혁의 과정에서도 국가권력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혁은 어차피 국가 문제와 얽혀요.

국가권력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하는 식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고, 강화되고 약화되는 측면이 복잡하게 뒤얽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국가역할이 변형되고 있느냐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거죠. 국가가 지구적 자본가 계급을 지원하는 세력이 된다는 강선생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르시는 “국민적 경쟁국가”란 개념을 쓰는데, 해외시장에서 자국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가체제를 가리킵니다. 이게 선진국 형이죠. 세계 자본주의에서 자국자본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국민적 경쟁국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면, 멕시코 등 자국자본의 경쟁을 포기해버린 국가들의 경우, “탈국민적 자본유치 국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적 경쟁국가에서 탈국민적 자본유치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동연: 국가가 지구적 자본가 계급에 봉사한다는 설명 말고 다른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화론자들 중에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요청 중의 하나가 이른바 권역 간 ‘문명론의 조장’입니다. 헌팅턴의 경우에도 문명론적 시각에서 기독교 이데올로기, 아랍이데올로기를 극단화시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 담론을 퍼뜨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른바 ‘갈등적 문명론’을 학자들이 제기하지만 기실은 국가가 이 담론을 받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구적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발언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칠레의 경우를 보면 우파 지식인들은 지구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가톨릭 민중계급들의 세력화를 저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실제로 지구적 자본가 계급들에 맞서 FTA나 문화지배에 저항하는 주체들은 남미의 가톨릭 민중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른바 기독교적 문명의 전지구적 확산이 자본과 연계되어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지구적 자본가들은 이렇게 국가가 문명론을 조장해서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합니다.

2부 한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사회: 김선생님께서 최근 들어 한국이 국민적 경쟁국가에서 “탈국민적 자본유치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세균: 기본적으로 미국적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죠. 즉, 아메리칸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도 다 신자유주의를 하지만, 과거의 사민주의적 개혁 등을 통해 미국 신자유주의와는 많이 다르지요. 유럽의 신자유주의 정치가들도 미국의 ‘천박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박한 미국 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점이 한국에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고, 자기 문제를 다른 나라에 넘김으로써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문제점이 더 심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권영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구조재편이 일어날 것이고, 금융자본을 미국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일본 자본, EU 자본, 중국 자본을 끌어당기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강력한 국가의 리더십 확립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산업구조 자체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해가는 이런 신자유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죠.

이동연: FTA의 교섭 본부가 하는 얘기의 핵심이 바로 우리도 미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허위의식이지만 이것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 뻔한데, 왜 이들의 선전에 동의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미국화가 내면화된 탓입니다. 우리 안의 아메리카니즘이 내면화되면서 이런 식의 허위의식을 쉽게 수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상징적 흡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미국화의 지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1984년 대만에 ‘클럽51’이라는 클럽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대만의 상류층 계급으로 중국 본토나 일본에 상시적인 위협을 받느니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문제는 그러한 주장들이 암암리에 한국에서도 상류사회에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유향, 원정출산, 어학원, 레저와 여가생활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미국화가 엄청나게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세계 스타벅스 체인점 중 규모가 가장 큰 1-5위가 다 한국에 있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젊은 세대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미국의 도시와 대학 프로 스포츠 팀들의 로고가 일상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거시적으로만 분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상의 미국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세균: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적 반공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많이 봐줬어요. 박정희 시대 때 보호무역을 용인해 주다가 이제는 용인하지 않고 개방을 요구하잖아요. 미국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금융 서비스, 문화, 지식산업 중심 체제인데, 전세계적 축적을 통해서 미국이 내부의 하위 빈민층이 엄청나면서도 고도 소비사회를 만들어서 체제내로 통합시킵니다. 주주자본주의가 미국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거든요. 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연금 등을 털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주주들이거든요. 개인을 금융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포섭시키니 그 속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죠.

강내희: 그걸 “노동자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세균: 노동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주주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처럼 이런 구조로 재편되면 미국에게 전략적 하위동맹으로 끼어서 얻어먹겠다는 얘기에요. 한국은 더 많은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고도 소비사회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전쟁, 무역적자위기, 국가재정위기 등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만 가능해요. 이렇게 찍어내는 달러를 누가 사느냐? 이 국채를 사는 게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 국가들

이 사주기 때문에 미국이 돌아가는 것이예요. 구조적으로 한·중·일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갈수록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폭발될지는 모르겠어요. 폭발하면 하루아침에 미국 자본주의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사회: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논의와 관련해서는 결국 새로운 경영 혁신과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윤을 저하와 과잉축적의 위기를 획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이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세균: 지금은 근본적 해결은 아니지만, 아시아권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권을 만들어야 미국발 위기를 덜 겪게 되어요. 탈미(脫美)적 관점에서 미국과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경제권 형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는 피해를 줄이는 방도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나?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이윤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2차대전 직후의 이윤율처럼 말이지요.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하려면 사실 그전에 대공황이라든가 대파국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런 대공황이나 대파국이 오면 어쨌든 계급투쟁이 강화되거든요. 거기에 산업기반의 대대적 혁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세계적 수준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어떻게 패권국가가 됐느냐? 그람시적 의미에서 억압과 동의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을 재건하고, 일본도 살려주면서, WTO 체제 등을 통해 선진국과 다자주의 정책을 꾀하는 거죠. 이제는 선진국도 배제하면서 미국 이익만을 위해 나가는 형국입니다. 군사적, 금융적 축적을 통한 패권의 축적 상태죠.

강내희: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죠.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죠.

김세균: 미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게 되고, 그 이후를 대체할 국가도 없는 상태죠.

사회: 200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의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국가의 부상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헤게모니의 위기 시에 미국은 법인자본과 같은 경영혁신과 교통통신 분야의 신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체제를 형성해가고 있었던 데 반해 현재 유럽과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맑스가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최종위기가 다가왔을 때 대안이 없을 경우 투쟁하는 계급들이 공멸한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려는 것은 결국 벼랑으로 달려가는 막자에 올라타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한국의 대자본은 이를 알고도 막차타기를 감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강내희: 한국 자본주의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 성장, 진행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어온 것은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부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옛날이야기이고, 전두환 정권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소고기 수입 등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1987년에 운동의 상승으로 인해 대치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야당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신자유주의화가 같이 갔다는 점이 중요해요.

김세균: 다른 나라도 대체로 그렇죠. 민주화와 신자유주의가 같이 가요.

강내희: 민주화라고 할 때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의 구축을 일컬을텐데, 이때 신자유주의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점을 좀더 강조해 줘야 한국에서 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개혁이 신자유주의로 갔는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요즘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는데 이렇게 보면 87년 체제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 심화되는 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내희: 87년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가는 정치적 기반이 된 것이죠.

사회: 그렇다면 87년 체제는 민주화에 수반된 자유화가 자본의 자유화로 변질되어가 과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강내희: 국내의 관료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이 사태를 보느냐? 경제적 자유주의의 강화조, 최근 재경부가 교육수장도 장악하는 과정을 보세요. 경제적 이성이 사회적 이성을 장악하는 국면으로 오게 되었죠.

사회: 한국의 관료나 재벌들이 미국의 경제위기 속에서 동조정책을 쓰려는 배경이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관료나 자본의 입장에서든 위험을 예방해야 할텐데 왜 이러는 겁니까?

강내희: 탈민족·탈국민 국가 내부의 관료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탈미’라는 관점이 없는 거죠. 민족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자들이니까요.

사회: 미국 자본주의가 안정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자본주의가 위기로 가는 상황을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 속으로 기름을 지고 뛰어 들어가는 식의 행동을 왜 할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김세균: 한국 자본 역시 지구적 자본의 형태가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미국 자본과 융합되었어요. 한국이 FTA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한국의 대자본이 이미 미국 자본과 융합되어 있고, 이게 자기의 조건이기 때문인 거죠.

강내희: 대우가 망한 게 유럽 쪽 자본과 융합했기 때문 아닐까요? (일동 웃음) 김선생님 말씀처럼 지구적 자본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자본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 가서 느낀 것인데요, 현대나 기아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현대도 기아도 그렇고 한국 자본은 미국 자본과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세균: 자동차, 핸드폰 등도 과잉생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일거에 망할 수가 있어요. 2-3년 잘못하면 다 망해요. 비탈길을 내려가는 자전거처럼 어쨌든 질주해야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으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1972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석한 기사(7월 31일자 12면)가 있었는데 70-90년대에는 40-60개월에 달하던 순환주기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 20개월 대로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순환주기가 사라져버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2005년 3월부터 새로운 확장이 나타나야 하는데 금년 들어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순환주기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만 남았다고 할까요?

김세균: LG는 독자적 판매망이 없는데 삼성은 독자적이고 국제적인 판매망이 튼실하게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삼성도 지금까지는 쪽 상승을 해서 잘 지냈지만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연: 삼성이 한국 무역의 40% 가까이 차지하죠.

김세균: 전세계가 어려우니까 국민통합이고 뭐고 어쨌든 자본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동연: FTA도 한국 자본주의의 일시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의 몇몇 자본을 밀어줘야 한다는 공포심 때문인 것이죠. 독점에 대한 붕괴라는 공포가 FTA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김세균: 한국 자본주의는 비탈길 자전거라서 멈출 수가 없어요.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만들어낸 위기도 고칠 수가 없이 더 많은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그 끝은 공멸입니다.

3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모색

사회: 자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대안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대안과 비자본주의적 대안이 있겠지요. 만일 이 상태로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의해 세계 전체가 질질 끌려간다면 마치 중세의 암흑기와 같은 참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텐데, 과거와는 달리 오늘의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구적 생태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인류가 공멸할 우려가 큼니다. 87년 체제에서 시도했던 개량적 제도개혁 등은 결국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기여했으면 했지 전혀 대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좌담을 통해 명백해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대안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권영근: 일단 미국중심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고, 1987년도에 민주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때만 해도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도입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992-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성장합니다. 김영삼이 호주인가를 방문하고 오면서, ‘세계화’를 선언합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국제화’란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말은 생소하여 비아냥거렸지요. 1997년 이후 IMF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요. 오히려 더욱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 휘말려 들어갔죠.

김세균: 노무현 정권이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권영근: DJ가 투기자본을 끌어들여서 IMF를 극복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대안의 논의가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시아 재편을 놓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분석하는 일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 중심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컨대 고속도로 같은 사회적 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기업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 봐야 하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모색의 경우, 기업 중심주의의 대안모색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의 대안모색이라면,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관점의 대안모색 논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사유 또는 사적 관리가 인정되고 있는 희소자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사회 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재산으로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며, 국가의 통치기구의 일부로서 관료적으로 관리된다든지 이유추구의 대상으로서 시장조건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자본에는 자연자본(대기, 물, 삼림, 연안 늪지대, 하천, 호소, 생태계, 환경, 농촌, 토양 등 자연환경), 사회자본(사회적 하부구조, 도로,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제도자본(교육, 의료, 금융, 사법, 조합 등)의 범주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미FTA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민영화, 사기업화, 이 유추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응논리로 서는, 바로 이 “사회적 공통자본”의 논리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세균: 유럽의 경우 과잉축적 위기가 와서 대처가 신자유주의로 갔을 때 스웨덴은 사민주의가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해결책으로 삼지 않고, 더 많은 규제와 장기적 사회화 프로그램을 내놔요. 하지만 스웨덴 사민주의는 좌절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좌파 사민주의도 끝까지 자본과 함께 하는 혁명에 집착했기 때문이지요. ‘자본에 대항하는 혁명’이 아니고 ‘자본과 함께 하는 혁명’이므로 뒷심이 없었어요. 근본적 대안은 이제는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력 문제와도 연결되고 일국적 차원에서 끝날 수도 없지요. 이런 형태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게 고민입니다. (여기서 퇴장)

권영근: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엄청나게 자원을 과다 소비하는 공업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계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모습도 탈공업화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 제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성 자체, 소비행태 자체도 자원을 소비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상품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즉, 욕망을 줄이는 형태 또는 조절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욕구는 상품소비에 의존한 욕구충족 즉 ‘의존욕구’인데, 소비를 위한 상품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지요.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전문가가 만든 욕구를 통한 상품소비이지요. 우리는 상품을 마치 우리가 골라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제공된 상품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비행위는 상품에 의존하여 욕망을 충족하는 의존욕구에 불과해요. 전문가의 상품에 대한 근위적 독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전문가 독재에는 공공성

이 없습니다. 사회적 공통 자본도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치가 또는 대리인을 뽑는 것은 일종의 신탁행위인데,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을 질 때만이 올바른 공공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사회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소비행태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강내희: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근대적 질서의 총화로서 오늘날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 이외에는 사실 온전한 국민국가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국민국가들은 미국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국민국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적 질서와 삶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방주의에서 벗어나는 세계적 질서 구축이 우선 요구됩니다. 동시에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 이란, 중동의 무슬림 세력 등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등 남미에서도 새로운 국가간 질서가 형성되고 있어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안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고, 미국식 삶을 수용하여 미국화하려는 공작을 지배블록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FTA 반대운동의 결과에 따라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적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재구성이 요구됩니다. 자본이 노동을 고용해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세계의 전부가 되는 게 소비자본주의의 양상입니다. 이때, 상품화되지 않는 사물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공재, 사회적 코뮌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사회적 코뮌들은 개별적 코뮌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regional)이고 국가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전지구적인 네트워크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만 코뮌생활을 할 것이니까요.

사회적 공공성을 기본으로 보장해 주려는 공공영역의 구축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 위에서의 다양성의 축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집단적

공공성을 돌이켜볼 때, 내부 민주화나 아래로부터 오는 요구를 묵살하면서 시행되는 전문가주의식 시혜주의는 위험합니다. 사회적 공공성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개입 없이는 구축되기 어려워요. 이런 구축을 통해서 한국사회 내부의 자본지배를 종식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대안도 도모할 수 있는 전망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 좀 요원한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입니다. 현재는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 투쟁 위에서, 이 투쟁에 참여하는 대중의 참여와 자기변신이 자양분이 되고 그 위에서 연대가 일어나면서 전망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권선생님과 강선생님이 동시에 사회적 공통재, 공공재(social commons) 혹은 사회적 코뮌들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관료적 틀에 갇혀버린 공공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공공성의 수행주체를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무제한적인 욕구를 줄이고 소비를 줄여 생태주의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단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강내희: 사실 욕망을 억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절을 해야 하죠. 절제, 억제, 조절, 통제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사회: 사회적 공공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욕망을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시네요. 어쨌든 개인한테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있죠. 기존의 사회주의적 대안은 바로 이런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괴리 때문에 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근: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인간성이 창출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체제만 갖춰져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 과거에는 답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순서와 단계를 두어 풀고자 했지만 그럴수록 악순환이 심화되어온 것 같아요. 개인들의 자발적 연합에 의해 생태문화적인 방식으로 코뮌들을 구축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적 공공성의 확대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공공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이중 운동 말이죠.

권영근: 부연하자면,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밑바탕에 있는 공업문명은 물질을 변형시키는 과정, 즉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명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질량 불변의 법칙 등을 보세요. 이 법칙에서 나타나듯 ‘=’은 가역성을 의미하니까, 자꾸 원래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뭔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강내희: 심선생의 문제의식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게 교육이지요. 이때 교육은 반드시 학교만을 의미하지는 않겠
죠.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밖에서의 교육에서 인간변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호교육적인 노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런 문제와 생태사회라는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지요?

사회: 비가역적인 것을 가역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일종의 사기죠.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공공성을 구상할 때 이 비가역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 사회에서는 각 개인도 자본주의적으로 물신화된 자기의 일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비가역성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동연: 사회적 공공성과 생태적 코뮌이라는 게 분리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율적 코뮌주의의 자기활성화가 개인의 억제나 금욕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발언들이 절실합니다. 생태적인 코뮌주의가 사회적 공공성의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할 건지가 필요해요.

강내희: 권선생이 말한, 사회조직의 관점을 비가역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필요합니다. 예컨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소모지요. 그렇게 동의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폐기물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담배들을 피우시는 겁니까? (일동 웃음)

사회: 사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생활에 재활용(recycling)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말을 기워서 신는 것과 새로 사서 신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기워 신는 데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낡은 양말을 버리고 새 양말을 사버리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이런 수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양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비-상품의존적인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지를 기워 입으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개인들을 새롭게 구성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근: 공업문명과 달리 생태계, 환경, 농촌, 먹거리, 생명과 관련된 것은 사실 모두 비가역적이에요. 엔트로피 증대법칙에 토대를 둔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엔트로피 증대법칙이 주는 함의, 즉, 생명 시스템의 본질적 원리는,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에 바탕을 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복지사회는 인간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자연생태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인식하에서 전면적인 사회 제도변혁을 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엔트로피 증대법칙에 토대를 둔 생명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은 자연순환과 사회순환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그런 순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강내희: 열역학 제2법칙에서 네겐트로피는 예외적 현상입니다. 네겐트로피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 부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들은 파괴의 길, 불가역적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 사회적 상상력으로 수용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이 요구하는 삶의 질서, 즉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른 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의 방식만이 아니라 비노동, 비남성, 비서구, 비주류의 삶의 방식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운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 운동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과 생태주의 운동, 여성이나 소수자 운동은 이제까지 평행선을 달려왔어요. 이 양자를 새

롭게 결합하는 것만이 대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노동을 넘어서 반자본 세력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합니다. 그런데 한미FTA 저지투쟁에서도 농민들이 열심히 투쟁하는 데 반해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자기 전선 방어에만 급급한 현실을 놓고 보면 공동투쟁과 연대의 강화라는 게 쉽지 않은 듯합니다.

강내희: 농민의 경우는 생존을 위한 투쟁 상황인 것이고, 노동의 경우는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노동자들이 못나서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극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자본주의 투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동적 계급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행한 일입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노동자들 이외의 다른 사회주체들과의 연대를 이루지 않으면 대안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을 버리고 노동자계급과 연대 없이 농민이나 다른 소수자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비자본 세력들 간의 연대가 얼마나 공고하게 되고, 그 연대가 얼마나 비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데 기여하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동연: 한국 노동자들은 주로 대기업 노조이고, FTA를 통해서 대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 노조 집행부를 엔엘(NL)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해서도 FTA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겠죠. 심지어는 FTA의 체결 조건으로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반세계화와 관련해서는 FTA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FTA 이전까지는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FTA가 정말 결렬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짚으면 합니다. 또, 이후 FTA가 체결되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 투쟁과 더불어서 각 주체들

이 가진 자기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가령, KT가 사실은 공공자본이지만 민간자본처럼 행동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공공성에 대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권영근: 새로운 대안사회는, 노동자 부문이 중요하죠. 현재의 노동운동은 단순한 형태예요.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제 결론은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몬드라곤 같은 곳은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자기 네들끼리 협동하고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소비자를 조직해야 합니다. 생협, 소협 등을 통해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모색할 수 있어요. 원리적인 내용들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협동조합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조직이거든요.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발랄함(conviviality)이 있는 사회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자본가와 싸울 때는 싸우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싸움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 조직화, 노동자 조직화, 농민 조직화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행구조(association)가 나타나야 해요. 하나가 바뀌어서 연결된 하나가 또 바뀌는 식으로,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강내희: 권선생님 말씀에 의문이 하나 있어요. 협동조합의 사례들을 한국에서 보면, 농협, 수협, 출판조합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지요?

권영근: 물론 협동조합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지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협동조합 원칙을 고쳤어요.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협동조합들이 신자유주의를 따라갔고, 그러다가 많이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망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일본의 협동조합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하부조직은 반(班)이라는 소규모 공동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즉,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지 않아서 문제였다는 것, 협동조합의 정체성(Identity)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하

에 협동조합 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내희: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이 과연 위협적일까요? 일본에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일본은 신자유주의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권영근: 일본보다 더 좋은 사례는 몬드라곤의 사례죠. 가장 모범적인 곳은 바스크 지역 전체입니다. 거기가 진정한 모델이죠. 하지만, 일본 생협의 힘도 굉장히 세죠.

사회: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것도 일본의 생협이 농업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권영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제 협동조합 연맹 회의에서 새롭게 세운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립과 자치의 원칙입니다. 정부와 결탁하면 협동조합의 개혁적 운동성은 상실되고 그 정체성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국가로부터의 죽음의 키스’라는 거죠. 다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하고, 지역을 장악해야 세계화 물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인식. 이 자립과 자치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협동조합의 정의도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어소시에이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조직이라는 것. 즉,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되어 가도록 운동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협동조합의 역할도 과거에는 경제적 욕구충족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조직은 사업체(enterprise)이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이것은 공동소유 사업체라야 하고, 운영과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사업체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맞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강선생이 말씀하신 한국의 거대한 협동조합은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라 볼 수 없지요. 여기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즐거움을 느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대조직에 불과해요.

사회: 그가 노동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은 간간이 조직되어 왔지만 사실상 분리되어 왔었는데 이 양자의 측면이 어떻게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생산-소비 협동조합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역할뿐

아니라 불세비키 혁명기의 소비에트가 그랬듯이 지역평의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한때 부분적으로 가능했던 이런 방식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복원되고 더 발전하고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강내희: 몬드라곤도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운동과 소비자운동의 결합, 그리고 지역운동이 그것입니다. 지역운동이 되어야만 지역사회에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이 가능하죠.

사회: 앞서 말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의 경우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하게 조직화된 대중의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약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힘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없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방법이 바로 권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소시에이션’의 현대적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소시에이션’이 활성화되면 노동운동과 생태운동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영근: WTO와 FTA의 파괴적 힘의 영향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단시간에 파급되는데, 이를 차단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가령, 지역병행통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통화 1,000원과 예컨대 안동에서만 사용하는 1,000원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9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만원은 안동통화로 지급할 경우, 그 10만원은 안동에 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안동의 지역경제나 문화를 향유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이동연: 지역화폐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다중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권영근: 이선생이 말하는 LETS식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미국식이거든. 하지만 병행통화는 성공하고 있어요. 전세계 3,000여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회: 보다 발본적인 대안모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환상을 좇거나 아니면 대안은 사민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

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사민주의가 현실적 대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민주의가 가능하려면 자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본의 실질적 포섭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이런 힘을 조직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민주의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민주의는 자본에 저항하며 자본을 넘어서려는 아래로부터의 노동-다중의 새로운 조직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양상일 수는 있어도 그 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민주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대안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의 부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점이 잘 인식되지 않으면 결코 87년 체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87년 체제와 그에 대응했던 사회운동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사민주의적 문제설정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려면 이중의 자립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평의회 같은 정치조직화 과정의 전국적-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함과 아울러 개인의 물질적 필요를 비-상품의존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자립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어소시에이션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두 운동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연: 마지막으로 대안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문화적 실천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번에 월드컵 공연 건으로 독일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베를린에서 ‘우파 파블릭’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회주의 영화를 만들던 국립영화제작소였는데요 통독이 되고 나서 이 건물이 공동체 문화를 꿈꿔온 예술가들에게 건네졌습니다. 그곳에는 독일 예술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브라질,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카페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유기농 야채와 빵을 만들어 자급자족합니다. 일종의 대안적 문화 코뮌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비용은 예전의 1/4도 안되는데 과거보다 훨씬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역과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적 코뮌 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내희: 코뮌이라는 것이 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공공성이 있어야 코뮌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사회: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지면 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리: 문강형준 (서울대 영문과 박사과정)